



국책 사업과 사회적 갈등 조정

배 순 훈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960년대 중반 필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갈 당시 미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많은 기대를 걸고 대학원의 기초 연구에 많은 국가 연구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다. 필자도 그 혜택을 받아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비를 지원 받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기술자로 취직한 미국 회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기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TMI(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극저온 원심 압축기를 설계한 경험이 있다.

후에 카터 대통령 시대에 그 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여 폐기되었지만 가동 당시에는 주민들의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잘 정돈하여 그 근처에 살던 필자도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놀러 간 적이 있다.

당시 사고는 운전중 작업자의 실

수로 인한 것이지만 발전소 설계에 원천적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여러 번의 진화 과정을 거쳐 PWR 및 BWR로 설계가 거의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안전 규제가 강화되어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환경 운동가들의 표적이 되면서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 이제는 건설하지 않게 되었다.

프랑스도 '위대한 프랑스'를 외치던 드골 대통령 당시 20년에 걸쳐 원자력발전소 40기를 건설하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기업 차원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제 중국이 새로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로

게 산업화를 하는 중국과 인도가 향후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아마도 인류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럽과 미주의 각각 4억 정도의 인구가 선진국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으로 생기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30년 동등한 생활 수준으로 발전할 20억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는 지구의 인류 생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실적으로 입증된 최신의 건설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류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도가 과거 구미식 발전을 주장하고 계속 화석 연료에 의존하겠다고 하면, 기존 선진국과 향후

산업화하는 나라 간에 분쟁이 계속 될 것이다.

국제 정치 전문가가 아닌 필자는 세계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와중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인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세계 발전의 중심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는 셈이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인류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적어도 한 가지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중심 국가가 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한 화합의 국책 사업

경제·정치·사회적인 문제는 학문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주요 국책 사업인 남북 평화 공존(햇볕 정책의 기초 변화는 없음), 뉴딜(New Deal)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방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술 혁신 중심의 경제 발

전 등은 취지는 좋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항상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게 마련이다.

북한은 남한의 미미한 경제 도움으로 중국식 산업화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원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 각자가 어떻게 잘 살게 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 기금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든가, 수도권에 기회가 많은 고급 기술자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기를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대학과 연구소에 국가 연구비를 투입하여 혁신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려 한다든가 등등 사회 구성 요소의 목표와 사회 전체의 목표가 서로 부합하지 않고 충돌한다면 국책 사업은 결국 사회 갈등만을 조성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

결국 해결책이라면 진부한 얘기이지만 과거에 대한 용서와 보다 큰 미래를 향해서 화합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 바로잡기’를 하다 보니 IMF 위기를 당했고, ‘부정 부패 일소’를 주장하다 보니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공무원 부정이 더 심해졌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다 보니 새로운 혁신 세력과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분쟁의 골이 깊어져 각자가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강화된 점은 있으나 우리 사회 공동의 경쟁자인 주변 국가들의 발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합의된 전략이 없어 동북아 또는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의 안전한 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화한다면 우리는 인류 사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전 국민이 공유한다면 아마도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행동이나 주민이나 환경 단체들의 과격한 시위도 용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폐기장이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건설이 되고 우리의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원자력 이용 실적이 인정을 받으면 경제적인 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바로 인류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항상 위험한 기회라도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면 일치 단결하던 우리의 국민성이 왜 이 기회에 협력할 수 없었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